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7일 (수)
제 26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회 앞 평화의 불씨
2.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3.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국회 앞 평화의 불씨

이동화 씨 무기한 농성... "파병연장 절대 안돼"

미군의 이라크 팔투자 대공세로 전쟁의 불길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반전평화 활동가가 국회의 파병연장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에 온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매일 들던 헬기소리가 이제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라크의 아이들과 나는 약속을 잇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라크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16일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이동화 씨의 말이다.

"커서 되고 싶은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는 이라크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라크로 갈 결심을 했다"고 밝힌 이씨는 작년 6월 이라크로 떠나 복구사업을 도왔다. 올해 9월 이라크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동화 씨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팔투자 학살 중단, 한국군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한국군 철군'을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

이씨는 미국의 팔투자 공격에 대해 "미국이 1천3백 명의 이라크 저항세력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 이라크에는 저항세력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모두 아이들, 여성, 노인, 아버지가 어머니"라며 "정밀폭격이니 정밀사격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미국의 거짓선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팔투자의 현 상태에 대해 "지금 팔투자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며 "의약품뿐만 아니라 담요, 빵 등 생필품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어 현지의 활동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분통을 삭이고만 있다"고 전했다.

이라크에서 학교 재건 등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나는 약속이 이씨에게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씨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꼭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씨는 천막농성뿐만 아니라 국회 앞 1인 시위 등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16일 각계 인사 357명의 '파병연장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세균 공동의장은 "대통령이 미국에게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이라크에 파병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을 어떤 명분으로 비판하고 전세계의 여론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자이툰 부대 철수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기사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체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정부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방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쟁쟁기 자치경찰제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소장은 정부안이 △시·군·구 산하에만 자치경찰을 두기로 했고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현재의 국가경찰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6천여 명의 자치경찰을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군·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둘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유지의 횡포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나 식품안전 단속요원들에게 경찰제복을 입혀 놓은 명목상의 자치경찰제'로 전락하는 것이 예상되고, 현재의 국가경찰을 줄이지 않고 자치경찰을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계명대 경찰학부 최용필 교수는 "현재의 국가경찰은 그대로 둔 채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별개의 자치경찰을 추가한다는 구상은 자칫 기득권 구조의 반발을 비켜가면서 적당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면피성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정부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광역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을 이 위원회 소속으로 두며 △검·경간 수사권을 조정하거나 경찰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도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찰제에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정부안으로는 곤란하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정부혁신위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5년에는 시범실시를 하며 2006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11월 10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한국 토종인 '생산적 복지'를 만들어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이뤄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면서 사회 전반에 노동윤리를 강화해왔다. 참여복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불모로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을 하도록 하는 복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은 언뜻 보기에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확대, 창업지원 등의 일자리 창출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아래 EITC)의 도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다.

'일자리 창출정책'은 현실의 노동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이 처한 기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다. 임금노동자의 55%가 넘는 사람들이 불안정노동자이고, 대부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또한 상당수 저소득층이 임시직과 일용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해결 할 근본적인 방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은 불가능하다. 세계 제1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자랑하는 한국정부는 오히려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단행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성역 없는' 노동시장유연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국경과제회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법안 개악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라고 독려한다. 과연, 어디서 어떤 일을 하란 말인가?

더욱이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결국,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펜잡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제기한 예산이나 운영 방식, 일자리의 형태를 볼 때, '펜잡은 일자리'가 아니라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을 창출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한 편으로는 '그래 복지라도 잘되어 있어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수 있다면' 힘든 일은 버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EITC는 우리의 생활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 EITC는 소득세액을 감해주거나 되돌려주는 것이기에 우선 일을 해서 소득세가 있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EITC 도입 이후 혜택을 받기 위해 불안정노동자로 진입하는 층이 증대되고 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만 생존권이 보장되며,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가

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EITC의 도입과 더불어 '노동무능력자'에게만 기초법의 적용을 한정할 것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ITC의 효과도 미비하다. EITC 적용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한정돼 있어 노동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실제 차상위계층도 절대적 빈곤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기초법의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ITC 도입은 기초법의 생계급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EITC 도입을 통해 노동빈곤층의 소득보장과 노동유인이 높아질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도적 환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결국 정부 정책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엄포로 빈민, 노동자, 민중에게 강제노역과 불안정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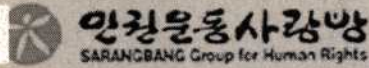
복지와 생존권은 노동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더 이상 개인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 때 노동시장 참여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며 생존권이어야 한다.

◎ 성은미 님은 빈곤사회연대 정책팀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8일 (목)
제 26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희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빈곤은 국가폭력
2.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3. KT를 고발한다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둥! 둥! 둥!

북 소리에 맞춰 세 걸음 걷고 두 손을 모아 찬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한다. 그 뒤로 펼쳐 어에 몸을 의지한 사람들이 힘겹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대신 한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17일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36만8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 따라 1인 가구에 지급되는 한 달 최저생계비이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협회장은 "36만8천 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확인돼 왔다.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삼보일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빈곤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정부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빈곤해결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빈곤은 분명히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빈곤체형이다, 노숙체형이다 호들갑을 떨며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에 경고하기 위해 삼보일배에 나섰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빈곤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국가의 폭력"이라며 "삼보일배를 통해 최저생계비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 김종현 빈곤팀장은 "정부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기생해서 사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빈민들이 기대어 살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시장 퇴출이 곧 빈곤이 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보일배에 참가한 이승연 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수급대상자이다. 가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며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 고지서가 자꾸 날아오지만 결국 낼 돈이 없어서 전기가 가스 등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0월 20일 현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

서울역에서 시작한 삼보일배는 여의도 국회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되며, 행진이 끝나는 19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제가 개최된다.

<기사 처음으로>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지난 5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아브그라이브 교소도에서의 잔학행위 장면들은 전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아브그라이브는 이라크 최대의 교정시설로 바그다드 함락 후 미국 헌병 800여단이 관리하고 있다. 미군은 2003년 10월과 11월에 여기 수감된 이라크 저항세력과 일반인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이 자행했다. 당시 이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국제적십자사에 의해서도 '개략적인' 조사가 진행된 후였고(국제적십자사는 다음해 2월 이라크 내 미국의 교도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현지 사령부와 정보기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불거진 것은 한 미국 헌병이 고문·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미군사령부에 고발하면서부터였다.

2004년 1월 미국은 비밀리에 특별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헌병 800여단의 지휘관들이 경질되었지만 고문·학대행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고발한 미군 헌병은 이 영상을 CBS 방송에 제공했고 4월 28일 CBS의 간판프로그램인 '60'분 이 보도하면서 큰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자체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고 그 자료가 전세계에 일파 만파 퍼지게 된 것이다.

부시가 '역겹다'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학대 사진들만큼이나 역겨운 것은 미국 고위층의 언사였다. "더 잔인하고 놀라운 사진도 있다"고 말한 당시 국방장관 럼즈펠드는 추가 사진을 미의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면서 "이라크에서 이용되고 있는 포로신분 기법은 국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는 "이라크는 물론 아랍세계의 여론을 악화시켜 미국인들에 대한 보복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진의 일반공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체니 역시 "미공개 사진과 비디오를 공개해선 절대 안된다"라고 못박아 이들의 잔혹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케 했다.

이 사건으로 세계와 이라크의 민중들은 미국이 얼마나 위선에 차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이라크를 다스리던 미국의 브레머 행정관은 사담의 처하에서 고통받았고 고문받은 이들을 위한 추모기념관을 지으려던 중이었다. 이 추모기념관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워싱턴이었던 셈.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미국이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다. 미국은 아브그라이브만이 아니라 쿠바의 관타나모, 아프간에서 이미 같은 짓을 저질렀고 이것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KT를 고발한다

왕따, 전화 감시 등 노동자 탄압 현재진행형

"어느 날 출근 해보니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다. 사실을 알아보니, 평소 팀장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 팀원이 컴퓨터를 치워버린 것이다. 그 동료와 팀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누군가 다음 날 책상 위에 다시 컴퓨터를 갖다 놨다. 하지만 그 컴퓨터는 고장난 컴퓨터였다"

13일 한국통신 케이티(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한 집담회에서 상품팀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경험담이 쏟아졌다. 2003년 9월 구조조정을 실시한 케이티는 같은 해 12월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이들 상품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꾸준히 이어져 지난 7월에는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중언대회를 진행했고, 몇몇 노동자는 우울증 등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7월 8일, 10월 14일자 참조>

'어느 날 책상에서 컴퓨터가 없어지는' 황당한 사건을 겪은 김모 씨 역시 상품팀 노동자다. 김씨가 상품팀으로 전근 온 계기는 더 '기막히다'. '예전에 일하던 부서의 담당 과장이 직원을 모르게 직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10개씩 개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연히 내 이름으로도 10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길래 항의했더니 이후 고과 등급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부장이 면담을 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기에 거부했더니 이후 몇 번이나 다른 팀으로 발령을 받다 상품팀으로 오게 됐다"라고 김씨는 전했다.

역시 상품팀 노동자인 신모 씨는 "명퇴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과장으로부터 명퇴를 독촉하는 전화가 수시로 왔다"고 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과장의 전화는 심지어 새벽에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신씨는 끝까지 명퇴를 거부했고 어느 날인가부터 슬취한 목소리로 새벽까지 전화를 걸던 과장이 사무실에서 보이지 않기를 시작했다. 결국 신씨를 '명퇴시키지 못한' 과장이 대신해 '명퇴를 당한' 것이었다. 신씨는 "회사는 명퇴 인원을 정해서 할당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명퇴를 거부하면 대상자를 바꿔 끝내 명퇴 인원을 채우고야 만다"고 전했다.

문모 씨도 "팀장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어보는 통에 골치가 아플 뿐 아니라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 이는 상품팀 노동자 대부분에게 해당된다. 상품팀 노동자들이 영업을 나가면 사무실을 떠나는 순간부터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계속해서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화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다. 한번은 문씨가 부장과 면담하던 중 부장이 "당신은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왕따'시킬 수도 있다. 다른 직원들더러 당신과 함께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서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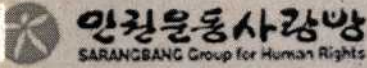
도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밝혔다. 회사 내에서 '왕따 현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회사로부터 극도의 차별과 감시를 받고 있는 케이티 상판팀 노동자들은 현재 이와 관련한 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영상물도 제작하고 있다. 이들 케이티 상판팀 노동자들은 용기 있는 증언 한마디 한마디로 차별과 감시에 저항함으로써 거대 공룡 기업 케이티에 대해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9일 (금)
제 27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2.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3.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4. '국영수' 대신 열정을 보충하자!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이 파업을 끝냈다. 이틀만에 끝난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3천 6백 여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전공노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이들에게 '일벌백제'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해임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전공노의 '단체 행동'을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집착하는 '집단 행동'으로 매도했다. 이는 단체행동권이라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이미 민주노총 등은 200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아래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법률 뿐 아니라 실질적 노사관계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파업권'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태러 위협이 고조되고, 유가 급등 등의 시기에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권익 확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다.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8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는 폭압'을 강하게 성토했다. 행자부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에는 △통화 내용 조회 및 위치 추적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징계 △징계권 행사를 회피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공대위가 발표한 인권 탄압 사례는 더욱 점입가경이다. 체포영장도 없이 가택 수색을 일삼고 집회장 근처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공무원처럼 보이면 무조건 잡아간다' 대범함을 수없이 보였다. 경찰은 이때 미란다 원칙 공지 등 기본적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량 해임 선언 역시 '대화과 타협의 노사관계'라는 정부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보장'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것이다.

전공노는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목표로 천명했다. 이는 전공노의 바람일 뿐 아니라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전공노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뒷걸음질치는 민주주의를 목도하게 한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지은이: 김민배/ 펴낸이: 인하대출판부/ 2004년 2월/ 264쪽

국가보안법이 아닌 어떤 법이 이토록 많은 공격과 옹호를 양극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

올까?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국회와 거리를 오가며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의 결집도 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지반대론자들은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서 우리 사회 헌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독의 헌법체제, 즉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형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역사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본질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전투적 민주주의가 국내 헌법체제에서 해방정국, 5.16 군사쿠데타, 10월 유신, 5.17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변신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헌법상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서독의 본(Bonn)기본법이다. 본기본법에서 이 원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표현된다. 즉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정당은 헌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유신정권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속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라는 것.

저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향한 고뇌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며, 2004년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진보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18일 영상미디어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 <베네주엘라의 볼리바르 혁명과 미디어 전쟁,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운동>에서 베네주엘라 미디어 활동가 마르셀로 안드라데 씨는 민중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해낸 미디어운동을 소개하고,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공동행동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베네주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가히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고 있다. 1989년 대규모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인 카라카스 봉기는 1992년 민중과 군대를 연합하게 했고 1989년 봉기의 총사령관이었던 위고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 자유 선거 과정을 통한 새 헌법의 제정 및 승인으로 이어졌다. (차베스 당선 후 진보적 좌파의 승리를 베네주엘라 혁명가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 '볼리바르 혁명'이라 부른다.) 이 같은 성공은 차베스 대통령의 대중적인 리더십과 함께 풀뿌리 민중운동 네트워크와 혁명 의식 그리고 이미 오래 전 토착민과 흑인공동체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혁명과 반혁명 세력 모두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미디어'. 1992년 군사 봉기 당시 차베스의 전설적인 방송과 이어지는 상업 미디어들의 혐오스러운 왜곡 보도와 쓰레기 방송, 대안 미디어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는 볼리바르 혁명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2년 해적 라디오와 인터넷 웹사이트, 직접 만든 전단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음향 시설을 한 트럭, 이동 전화의 문자 서비스, 거리에서의 구호나 노래 등으로 반-쿠데타 집단 행동을 이끈 대안 미디어와 공동체 미디어는 지금도 상업 미디어에 맞서고 있다.

볼리바르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안드라데 씨는 전한다. 공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민중공동체'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 매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원과 권력을 쥔 관료제와 싸우는 한편,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ANMCLA(공동체 해방 대안 미디어 전국연합)는 이제 베네주엘라 국경을 넘어 아메리카 전대륙에 걸친 대항 문화적 저항 전선의 구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세미나를 통해 알려졌다.

<기사 처음으로>

'국영수'대신 열정을 보충하자!

제2회 수능반대 페스티벌 열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새장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새장을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

울 수 없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돼지고기 등급 판정을 받듯 등급을 받아 몸에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다 말고 위태롭게 발을 떼며 욕상으로 올라간다. 한 학생은 책상에 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수능 시험지로 싸고는 망치로 내리친다.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 '돼지고기 등급 판정 받는 날'의 내용이다.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17일 신촌에서 진행된 '수능반대 페스티벌'에서는 "획일적 입시 교육과 수능시험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장에 있는 소망나무에는 "오늘은 몇 명이나 인생을 포기할까? 작년의 아픔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수능반대'를 외친다"라는 글이 매달려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에서 준비한 수능반대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1회 수능반대 페스티벌은 수능시험 도중 자살한 여고생 추모제로 진행됐다. 다행히 이런 불행한 일이 올해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한 해에 2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한다.

이날 멋진 춤 공연을 보여준 경북여고 '스카이'는 "수능시험에 얽매는 스스로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수능이 없어져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사회를 본 '날라리 자퇴생' 판 씨도 "스카이에게 춤은 밥이고 꿈이고 삶일 텐데 그들에게 국영수로 수능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수능이 그들의 꿈과 삶을 앗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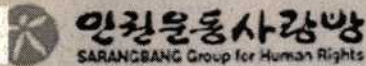
이날 자유발언대에서 발언한 황현숙 씨의 말처럼 "수능이 없어진다고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수능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빈곤과 차별이 대물림되는 학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학벌없는 사회'는 학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차별의 내면화'를 꼽았다. 학벌은 개인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해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 "이른바 이류·삼류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은 평생 이류·삼류인간이라는 뼈아픈 정체 의식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대학을 못나온 이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는 게 '학벌없는 사회'의 생각이다.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다.

수능반대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는 "지식교육 위주의 서열식 평가체제에 대 문제제기는 오래됐지만, 교육부는 도리어 오랫동안 고교등급제를 방관해왔고 고교등급제 확대와 본고사 부활을 초래할 새 입시안을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20일 (토)

제 27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2. 지옥같은 기억에서 탈출
3.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미없는 쇼'가 계속되고 있다. 김 장관의 '최저생계비 체협'에 이은 '노숙인 체협'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 독촉 세금고지서를 보며 언제 전기나 가스가 끊길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설 방 한 칸이 없어 차가운 지하보도와 신문지 한 장에 몸을 맡기는 노숙자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을 생색내기식 '현장조사'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대책'은 더 가관이다. 일을 더 할수록 지원을 늘리는 '근로소득보전체계'는 노동 유인 효과를 통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의 확대 등은 '자립'과 '민간 참여의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며, 최소한의 비용만을 정부가 충당할 뿐 나머지는 민간에게 떠넘기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시장으로 진입만 하면 마치 가난이 마술처럼 해결되는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전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만이 빈곤탈출의 최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정녕 손이 갈라져라 계단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난 때문에 못 배워서 펜 값은 일자리는 꿈꿀 수조차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노동할 의욕이 없어서 '빈곤탈출'을 못하는 것인가. 문제는 '노동 기피'가 아니라 일한만큼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탓이다.

겨울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따뜻한 손길'을 가장한 전시용 사업은 이제 신물이 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향상시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는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12월 1일 발표된다. 정부가 '빈곤탈출'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가난한 자들이 최소한의 생존도 지탱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허덕이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안도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지옥같은 기억에서 탈출

탈성매매 여성들의 응어리진 이야기

"(성매매특별법 반대)집회가 있으면 업소마다 참석자를 배당한다. 만약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론비를 내야 한다. 업주들은 우리 집에 술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을 정도이다. 나가려면 선불금부터 갚으라면서 집으로 찾아간다고 협박한다"

업소에서 탈출해 현재 쉼터에서 '재활'을 준비하고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은 지금 국회 앞에서 업주단체 '한터'의 단식농성에 결합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상황을 이 같이 설명한다. 19일 '다시함께센터'를 비롯해 5개의 서울 소재 쉼터들이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은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진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왜 아직도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소를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계속하려고 하느냐"며 의아해 하는 기자들을 향해 "그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고 경멸을 떠올리며 답답해했다. 대부분 '선불금'에 묶여 사는 이들은 "빚을 다 갚고 나가라"는 '업주의 협박'으로 그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 또한 오랫동안 고립된 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온 이들은 '불신'으로 가득차 있어 누군가 탈출매매를 권해도 선뜻 신뢰하지 못한다. 게다가 TV나 신문 등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보는 오로지 '업주'나 '마담'들에게서 듣는데 이들은 "내년 2월이면 성매매특별법이 없어진다"는 거짓말로 이 여성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안타깝게도 '가족'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업소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 반면 이들이 업소를 탈출하면 (업주를 통해) 가족들에게 자신이 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업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대표는 "여성을 가족부양이라는 명분으로 '심청이'처럼 희생시키는 우리 사회 풍토"를 비난하면서 피해여성 스스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길 권했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여성은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고 컴퓨터에 함께 오게 됐다"며 개인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업소생활에 대해 한결같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장안동 이발소에서 탈출한 한 피해여성은 "하루 2-3시간 자고 심지어 생리 중에도 '손님'을 받아야 했다"고 말한다. 살을 빼야한다고 '식사량'을 줄이고, 1년에 2-3일 있는 휴가기간에도 이른바 '삼촌'이라는 폭력배와 함께 다녀야 했다는 이들은 "빠가 부서지게 일해서 업주의 세금까지 대신 내줬지만" 남는 건 빚뿐이다. "한 달에 2-3백 만원 씩 벌기도 하느냐"는 질문에 미아리 집창촌에서 탈출한 피해 여성은 "물론 번다. 그러나 그건 아가씨들이 아니고 업주다"라고 잘라 말한다. 업주들은 피해여성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입금'을 받지만 현금카드와 통장 심지어는 신분증과 인감까지 모두 빼앗아가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집창촌에선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경찰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미아리 집창촌에서는 단속이 '뜨면' 1분만에 트레스를 벗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연습을 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 피해 여성은 증언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여성들은 모두 "컴퓨터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엇보다 컴퓨터처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편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라고 말해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를 가슴 아리게 보여주었다.

<기사 처음으로>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열차 운전 중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지가 떨리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 달리는 열차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열차 문고리를 잡고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한 도시철도 기관사의 말이다.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는 84명의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18명이 공황장애가 심각한 유소견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황장애는 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불안과 더불어 질식감, 어지러움, 이대로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극한의 공포 등의 신체·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장애로 신경질환의 일환이다. 공황장애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등도 있는데 이러한 신경정신질환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기관사의 경우에는 1인 승무제도로 운행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혼자 고립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유발된다. 또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기관사들은 보통 한 주에 주간근무 3번, 야간근무 2번을 번갈아 하는데 주간에는 보통 10시간, 야간에는 14시간 정도 작업장에 체류하게 돼 노동자들은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2월 14일자 참조>

지난 해 8월에는 두 명의 기관사가 적응장애, 정신분열 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 서민권 기관사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았지만 고 임채수 기관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사가 계속중에 있다.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및 요양신청을 진행해 승인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는 공사 측에 임시건강검진 실시를 신청했으나 공사 측은 '사후 프로그램'만을 약속하며 건강검진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9월 말 800여 명의 기관사들 중 84명의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자체검진을 실시했다. 이 검사에서 18명이 유소견자로 드러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증상이 심각한 7명에 대해 19일 집단산재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으로 노조는 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공사측을 노동부에 고소해 2005년 상반기에

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는 공사의 약속을 받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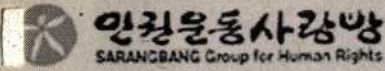
이번에 산재요양을 신청한 도시철도 답십리 지부 김권중 기관사는 "공황장애 증세가 있어 97년부터 약을 복용했고 2001년부터는 신경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온 것 같다"며 "많은 기관사들이 누구에게 '아프다'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직무스트레스연구회는 지난 1월 도시철도승무 직능직무스트레스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에서 지난해 신경정신과 치료 유경험자는 21명이고, 불안장애·공황장애·적응장애 등 신경정신과 정밀검진 유소견자는 무려 1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노협 김계천 의장은 "IMF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하루에 220여만 명을 수송하는데, 공황장애로 인한 공황발작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사들의 건강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도시철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공황장애를 산재로 인정 △신경질환의 원인인 장시간 운전, 불규칙한 근무시간, 작업환경 개선 △2인 승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시민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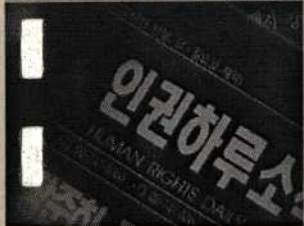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23일 (화)
제 27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2. 대공본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3. 지음의 인권이야기
 4. 주간인권흐름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기획탈북으로 인한 인권유린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획탈북은 탈북브로커, NGO, 선교단체, 언론, 정보당국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연재를 통해 기획 탈북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탈북자 증언의 자료는 월간 {말}이 제공했다.(편집자 주)

"돈을 벌기 위해 우리를 햇빛도 가린 아파트에 가두어 놓았다가 대사관에 집어넣는 게 인도주의입니까? 그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지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모깃책들은 바깥으로 열쇠를 채우고 하루에 한 번씩 왔다가고 큰 소리로 말도 못하게 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철조망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캐나다 중국 대사관에 진입하려던 탈북자 중 한 명인 이도 씨는 이른바 '아지트' 생활을 이같이 증언한다. 두 번의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그녀는 대사관 진입 직전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 씨는 9월 중순 경 한국행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모깃책'의 말을 믿고 복경까지 와 한 아파트에 감금된다. 모깃책들은 이 씨 등을 비디오로 촬영하면서 "만약 탈출해서 은신처가 발각되면 북에 있는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한국 국정원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사실을 누군가 고발해도 바로 알 수 있다"는 말도 내뱉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말투와 행동을 미루어 '탈북자 출신'이라고 이 씨는 증언한다.

이 씨는 들어가서 먼저 '입단속과 대사관 진입 방법'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면 한 사람씩 각서를 쓰는데 "한국 땅에 도착하면 계약한 5백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도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받는 정착금을 노리는 것. 한국에 가면 브로커들이 이 빚을 독촉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상황을 잘 아는 탈북자 출신이어서 발뺌을 할 수도 없다. 식당이나 유흥업소 또는 중국인과 동거하던 탈북 여성들은 위안화 몇 천원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사관에 들어가면 돈이 필요 없다"는 이유를 들며 빼앗아 간다.

탈북자들은 대사관 진입을 위해 주로 4개조로 조직된다. 그들은 1조와 4조를 '총알받이' '고기밥'이라고 한다. 이들은 돈을 미리 못낸 '후불제' 사람들. 1조가 출격해 길을 뚫어 놓으면 2조와 3조가 비교적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머지 4조가 그들을 엄호하며 마지막으로 돌격하는 식이다. 공안에 잡혀가는 것은 주로 1, 4조의 사람들이며 이 광경은 서구 언론의 좋은 '기사거리'가 된다고 탈북자를 취재해온 비디오 저널리스트 조천현 씨는 말한다. 이 씨는 타격조로 사용할 사람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른 탈북자 두 명과 함께 그 인원을 채우려 나온 것이다. 그 중 한 명은 경비 3천 위안을 받고 북으로 가 한국 정보당국에서 요구하는 '문건'과 함께 '보위부 가족'을 빼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북에서 작업을 하다 체포되었고, 다른 한 명은 탈북자들을 모아 다시 돌아갔다가 중국 공안에 발각돼 숨어있던 62명과 함께 강제송환된 것이다.

조천현 씨는 기획탈북 전문조직이 한국, 중국, 북한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큰 조직은 북경주재 공관에 진입시키는 '북경파'와 베트남과 몽골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베트남파', '몽골파' 그리고 연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김사장파'가 있다고 조 씨는 설명한다. 지난 7월 동남아에서 4백 50명의 기획탈북 이후 베트남과 몽골 루트는 막혀 최근에는 북경주재 공관을 이용한 기획탈북이 늘고 있다. 브로커들 역시 비용도 적게 들고 언론 효과도 볼 수 있는 '대사관 진입'을 선호하는 추세다.

<기사 처음으로>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씩워 연행

한 평화활동가가 1년 전 사건에 대한 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잡자기 연행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라크반전평화퇴장에서 활동하며 이라크에 다녀오기도 한 은국 씨는 21일 오후 1시경 자택에 있다가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체포돼 현재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은국 씨는 주요하게 2003년 11월에 있었던 노동자대회 참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1년 전의 일로, 그것도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변호사 이민석 씨는 "현재로서는 1년이나 지난 건으로 왜 대공분실에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희박한 상황에서 대공분실의 실적 올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은국 씨는 자택에 있다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가 갑자기 연행됐다. 은국 씨를 연행한 경찰은 초인종을 누른 후 스스로를 "박모 씨(은국 씨 아버지) 친구"라고 밝힌 후 문이 열리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은국 씨에게 수갑을 채운 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처음으로>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체동을 걸어라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범죄자들이 한순간에 개과천살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고,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 아닌가. CCTV가 설치된 지역만을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면, CCTV는 더 많이 더 뽕뽕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우범지역에 첨단 CCTV 272대를 설치하고 이것을 원격 통합 관리하는 관제 센터를 세운 강남구청은 내 미설치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감안해서 곧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 다른 구청도 뒤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경찰 역시 CCTV 설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니 전국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런데 CCTV의 개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의 경우는 CCTV에 찍혔는데도 화면상으로는 얼굴이 잘 식별되지 않아서 검거에는 도움이 안됐다고 한다. 해상도와 줌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CCTV를 써야 한다. 강남구 내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부유층 주민으로 위장한 절도범이 수 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관제센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얼굴 인식 시스템도 개발됐다는데, 범죄자 화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범죄자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 바로 앞에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투시 카메라를 도입해서 얼굴을 가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CCTV 앞에서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해서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던가.

너무 지나친 비박이 아니냐고?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CCTV의 설치 확대를 추진하는 자치구와 경찰의 주장이 이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첨단 기술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맹신한 채 자신의 인권을 하나둘씩 포기한다면, 충분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시나리오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현실이며 또 계속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잠깐만 상상해보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고 기록되는 사회. 누군가 맘만 먹는다면,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사회. 골목마다 경찰들이 삐죽이 들어서 있고 지나다닐 때마다 매번 불심검문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아니면 경찰이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것은 어떨까? 첨단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과연 이보다 덜 심각할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채로 행동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개인의 행동은 큰 제약을 받는다.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

범죄 예방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권 침해 소지는 명백한 CCTV. 법률적 근거도 없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로 확대일로에 있는 CCTV. 지금 당장 체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킹'의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평화운동가 이동화 씨, 팔루자 학살중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시작(11.16)/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 돌입(11.17)/ 비상시국회의 열어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집중 투쟁기간으로 결정(11.18)/장애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 진행(11.19)/4대 개혁 완수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11.20)/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목회자 2004명 '국보법 폐지 선언' 발표/평택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회 비준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하며 농성 돌입(11.22)

2. 빈곤'탈출지원'정책은 빈곤'고착강요'정책

정부가 발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에 대해 인권사회운동단체들 강력하게 반발... 빈곤사회연대, 성명서 통해 "사실상 강제노역과 불안정한 생활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비판(11.15)/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사회단체들,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3일 간 진행하는 삼보일배 시작/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노숙체험'한다며 서울역 방문... 빈곤사회연대, "'쇼' 그만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11.17)/삼보일배 마치고 국회 앞에서 문화제 개최, "빈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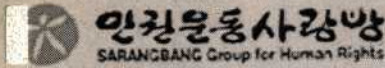
3. 기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탄압에 '단체행동권'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이틀만에 종료... 정부, "3천 6백여명 파업 참가자 전원 파면, 해임하겠다"며 으름장(11.16)/제2회 수능반대페스티벌 열려... 수능 폐지와 대학평준화 실시 요구(11.17)/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행정자치부 앞에서 전공노 기자회견 열어 전공노 탄압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는 탄압"이라며 강하게 성토(11.18)/업소에서 탈출한 탈성매매 여성들, 기자간담회 열고 "업주들의 협박과 가족부양의 의무, 사회의 차별과 냉대 등으로 업소를 탈출하지 못한다"고 증언(11.19)/도시철도노동자들, 공항장에 심각해 산제요양 신청... 1인 승무제도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증압감이 그 원인"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24일 (수)

제 27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2.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3.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4.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노동자들을 베풀 끝으로 내모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인권의 시선으로 적극 저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검토'만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3일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며 비정규노동법 개악에 침묵하는 인권위를 규탄했다. 안산노동인권센터 박현희 상임활동가는 "정부는 책임감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인권 현안인 이번 입법안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인권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해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조사, 연구,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업무로 하고 있지만 오랜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를 방문해 항의서한과 비정규노동법에 대한 의견서를 인권위 강명득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개악안이 통과된 다음에야 권고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치적으로 압력이나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정책국에서 검토 중이다"며 기약 없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활동가는 "인권단체에서도 지난 6월 비정규직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5개월이 넘도록 검토만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추궁했다. 이어 "인권위가 이번 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강력히 경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직무대리는 '반영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궁색한 답변으로 자리를 모면하기에 급급했다.

인권위는 2003년 비정규직 전담팀(TFT)을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후속작업도 벌이지 않은 채 입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면담을 마친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 연대회의 오민규 사무국장은 "예상은 했지만 인권위가 그것보다 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상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기사 처음으로>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기본 친완도 할 겸 저저분한 머리도 정리해 볼 겸 사무실 옆에 새로 문을 연 미장원에 갔다. "곱슬머리에 술도 엄청 많네요" 머리카락에 대한 품평을 한바탕 한 후 헤어디자이너는 마치 영화 '가위손'의 조니 뎀처럼 요란한 '가위 놀림'으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머리는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었다. 돈을 지불하고 나오려고 하자 헤어디자이너는 적립금이 쌓이면 공짜로 머리손질을 할 수 있다며 이튿날 이메일 주소를 적어달란다. 평소에도 공짜를 좋아하던 나는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며 이튿날 이메일 주

소를 종이에 적어 건넸다. "적립카드는 언제 주시나요?" 그러자 헤어디자이너는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카드는 분실도 심하고, 누가 주워서 대신 쓸 수도 있고 해서... 저희 가게는 지문 인식기를 들여올 거예요"

최근 들어 은행이나 공공도서관 등 생활 곳곳에서 '신분 인증' 수단으로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열쇠나 카드 등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생체정보 이용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상거래에서조차 생체정보를 이용해 '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생체정보를 활용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첨단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을 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영구 불변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개인간의 거래는 '상대방의 동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한번 등록된 생체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생체정보의 수집은 새로운 범죄와 그에 의한 피해를 예고하는 것과 같다. SF 영화에서처럼 생체인식을 통한 신분 증명에 보편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가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냐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윤택하게 지문을 찍어주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제공 여부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나 기업은 물론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생체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인권 침해 우려를 먼저 검토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자체를 막아야 한다.

방긋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헤어디자이너에게 아무런 말도 못해주고 나온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내일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생체정보 수집의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식량을 찾아 중국과 북의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는 '90년대 식량난'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60년~62년 중국 대기근 당시 중국에서 거주하던 30만 여명의 조선족이 북으로 이동했고 그 중 절반은 북에 정착했다. 북정부는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허용했던 것. 중국정부 역시 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유입된 북주민들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시적 이탈자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를 조사하고 돌아온 민주노동당(아래 민노당)에 따르면 90년대 식량난에 따른 탈북자들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며 80%가 여성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북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한편,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 자식을 낳은 경우 중국에 머물기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동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지적이다.

재중 탈북자가 20~30만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 8년간 탈북자들을 취재해 온 조천현 씨는 "탈북자의 숫자는 중국 공안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탈북자들은 조선족 거주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실제로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족이 총 1백 70만 정도, 탈북자가 그중 3만 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중국 공안이 연길 아파트 하나를 수색할 때 1명 정도는 발견되어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만난 연길주 공안국출입국관리처 부처장 역시 "연변에 4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 3만~5만 명이 탈북자라면 금방 터가 나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며 실제로 약 1만 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조 씨와 중국 공안 당국 모두 식량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은 2000년 이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증언한다.

'기획탈북'은 탈북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특정 목적을 얻으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기획탈북을 진두지휘하는 브로커의 배후에는 일부 NGO와 선교단체 그리고 정보기관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탈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조 씨는 실제로 "정보기관의 요원 박 모씨가 연길 두레마을에서 선교사로 위장 활동하다가 추방되었고, 군 정보기관의 임 모 중령이 조선족을 통해 북의 문건을 빼내오려다 발각되어 조선족은 처벌을 받았지만 임 중령은 한국에서 오히려 진급되었다"고 정보기관의 '활약상'을 전했다. 이와 같은 일에 가담한 탈북자 출신 브로커들은 '한국 정부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에 차 있다고 조 씨는 심각성을 전한다. 중국 당국은 현재 브로커들의 활동이 '주권침해이며 치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브로커들을 상당히 들뜨게 만들었다. 조 씨가 만난 브로커 최모 씨는 "미국 NGO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한편 돈도 벌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한인권법은 '탈북자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브로커 지원법'이라고 조 씨는 확신한다. "지금도 약간의 돈만 있으면 북에서 사람을 빼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주민이 합법적으로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50달러면 되고, 1백 달러만 있으면 북에 핸드폰이 들어간다. 핸드폰을 통해 북주민은 쉽게 브로커들과 통화할 수 있다." 조 씨는 미국의 자금은 이와 같이 기획탈북을 가속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개방하고 싶어도

허려 이러한 브로커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세력들로 인해 봉쇄당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한다.

<기사 처음으로>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경제봉쇄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학살입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취한 10년간의 경제봉쇄로 이라크 주민 15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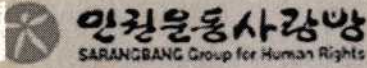
각종 현장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라크의 현실은 전쟁상황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의 경제봉쇄로 5살 미만 어린이가 매달 4천 5백~6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걸프전 이후 10년 동안 60~70만 명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죽은 것이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사망자수는 2백~3백 만에 달할 것이라고 현지 조사자들은 밝히고 있다. 경제봉쇄로 인한 필수 의약품의 수급불능과 더불어 필수적인 사회 기반의 붕괴 상황 역시 이라크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최악의 상황인데,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도시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1990년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이라크의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제재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핵무기보다 무서운 '대량살상무기'이다. 경제제재로 죽어간 이라크의 2백~3백 만이라는 수치는 핵무기를 포함한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에서 사용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범민중제관 준비위원회]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25일 (목)
제 27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2.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3. 국보법, 실량이 벌일 때 아니다
4. <알림>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 평가토론회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먼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확산방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촉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간부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중착취와 인신매매를 합법화시켰듯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또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량 정리해고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입법'이라고 부르지만, 파업 참가자들은 "이제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넋더리가 난다"며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확대로 가득찬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이번엔 막지 못하면 이제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될 것"이라며 "전국비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비정규직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1400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노동계와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정부와 여당은 사용자 측의 눈치를 보며 "법안 처리를 내년 초로 연기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대화과 타협"을 빌미로 법개악안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해온 정부의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단순한 연기 방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법 개악안 철회만이 해결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이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오히려 후퇴한 법안을 국회로 이송해 법안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부파업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며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면 우리부터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30여 명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삭발을 하고 구속까지 결의하는 '구속결단식'을 단행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언론 역시 브로커들과 함께 '기획'탈북에 공생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 언론은 한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브로커들이 직접 찍은 테이프를 사기도 한다. 조천현 씨에 의하면 테이프 하나 당 2천 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한국에 있는 탈북자 가족에게 보여줄 확실한 '그림'이 생기기 때문에 언론과 공생할 길 선호한다. 탈북자들을 대사관으로 밀어 넣은 후 촬영테이프를 언론에 판매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몇 시 뉴스 또는 몇 일자 신문을 보라고 확인시켜주고 '선불금'을 받는 것이다.

10월 29일 일본학교에 진입한 '어린 남매'의 조선일보 보도는 "지난해 7월 어머니만 먼저 한국에 들어가고 남매는 산 속에서 울막을 치고 생활했다"고 했는데 조 씨에 따르면 "남매가 일본학교에 진입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마련해준 안가에서 조선족의 보살핌을 받고 한국 위성TV를 시청하며 한국의 어머니와 통화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천신만고 끝에 '자유대한'의 품에 들어온 탈북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소셜스키'로 기획탈북을 포장하고 있는 셈. 남매의 어머니는 일본학교 진입 사진을 브로커들에게 받아보고 '선불금'으로 3백 만원을 줬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함에도 보수언론들은 꼬리를 무는 기획탈북 현상이 "북한체제의 종말로 남한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다(월간 뉴스21, 11/4일자)"와 같은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재중 탈북자들이 모두 기획탈북을 선망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아래 민노당)이 만난 이모 씨는 2001년 탈북해 현재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지만 "조용히 갈 것이지 왜 대사관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는가"라면서, 기획탈북에 나서는 10명 중 8명은 브로커들의 꾀에 빠져 나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98년 탈북해 중국인과 결혼한 김모 씨 역시 "시끄럽게 한국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라를 배반하고 와서 조용히 살면 좋겠는데, 소문에 휩쓸려 가는 것"이라며 같은 반응을 보였다.

기획탈북에 얽혀 있는 상황과 행위자들이 다양한 만큼 그 해법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브로커들은 1인당 평균 4백 만원, 위조여권의 경우 1천 만원까지 탈북자들로부터 갈취하고 있다. 조천현 씨는 정부가 기획탈북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을 맹비난한다. "브로커들이 (기획탈북)문제를 일으키면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조용한 외교'"라고 꼬집는 조 씨는 브로커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다. 민노당은 '남북 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금품을 대가로 북의 주민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착금'이 결코 탈북자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브로커들이 쟁기는 '선불금' '후불금'하는 돈이 모두 정착금을 노린 것이기 때문이다. 23일 민노당과 면담한 통일부의 정착지원과장 역시 "정착금이 오용되고 있어, 현금 지급을 줄이면서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탈북을 통해 한국에 온 탈북자가 다시 브로커가 되는 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한데 조 씨는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배경이 다른 만큼 '하나원'과 같은 일률적 교육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탈북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어 민감한 외교문제를 낳고 있다. 민노당은 탈북자들을 국제법 상 '난민'이 아닌 '경제유민'으로 규정하면서 북과 중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 간섭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결혼한 여성을 북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60년 대기근 때 북으로 들어간 조선족이 재입국했을 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한편 국제사회는 북으로 송환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 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노당 조사단은 "탈북자 중 14번이나 월경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는 북이 식량을 찾아 떠나는 사람을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조 씨 역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단 순 탈북자들의 경우 4주 조사 후 귀가 조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에 국가보안법개폐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3개 법안 상정을 놓고 세 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정을 유보한 것이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법률개폐와 관련한 사안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보법 관련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해 국회의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국가적 주요사안으로 계속 되어왔고,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수한 논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이제는 국회가 이를 입법과정을 통해 수렴해야 할 단계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과 임종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10명씩 참가했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이날 저녁 지난 18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뜻을 높이 들었다. 앞으로 국민연대는 '국보 끝장 실천단'을 결성해 26일부터 3일간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집중 홍보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총력투쟁기간으로 선포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실천단 참가문의 박래군 농성단책임운영위원장 016-729-5363)

<기사 처음으로>

<알림>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 평가 토론회

- ▶ 언제 : 2004년 11월 30일 오후 6시부터
- ▶ 어디서 : 성 베네딕도회 서울수도원 분도빌딩 5층
- ▶ 누가 : 인권교육네트워크
(www.hredunet.net/ hredu@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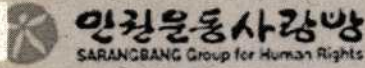
-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 총평과 2기 인권교육담당관실의 나아갈 방향

-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02-741-5363
다산인권센터 박진 031-213-2105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26일 (금)
제 27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① 'A&O그룹사'노조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인권용어해설집'>
3.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4. <알림> 11.27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① 'A&O그룹사'노조

"노조탄압 백화점"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며 싸움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무수히 많다. 바로 강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곳곳이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노조'라는 말이 '빨갱이'와 동일시되던 때가 있었다. '노조활동 한다'고 하면 해고는 물론이고 구속·수배까지 각오해야 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사회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노조는 회사에게 있어서 동반자가 아니라 오직 '탄압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조'가 여전히 '민주화'의 영역 바깥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사의 간부가 현장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정리하고 0순위"라고 말하며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노조 집행부와 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가압류를 신청했다. 그것도 모자라 조합원 28명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바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A&O그룹(현 APLO FC그룹)은 IMF 이후 1999년에 설립된 대부회사로서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를 주수입원으로 한다. 2003년 6월 당시 82퍼센트의 시장점유율로 국내 제 1의 대부업체였다가 문어발식 규모확장과 무리한 대출로 경영난을 겪은 결과 올해 3월 제일교포계 자본에 매각됐다. 현재도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7퍼센트에 달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직·파견직 노동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단행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정규직을 용역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발적 퇴사를 중용해 1천4백여 명의 직원 중 7백여 명을 퇴출시켰다. 이에 2004년 3월 22일 노동자들은 '에이앤오인터내셔널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5월 16일 에이앤오인터내셔널노조는 동일한 처지에 있던 그룹의 계열사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일반노조인 '에이앤오그룹사노조'로 전환했다. 에이앤오그룹사노조의 이제혁 수석부위원장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노조 설립의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이내 사측은 노조를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규정하고 '노조 죽이기'에 돌입했다.

'A&O그룹'은 '노조탄압 백화점'

회사는 공공연히 "노조에 가입하면 정리하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인사조치와 부당 징계를 가하다 급기야 7월 30일 28명의 노조원들을 정리하고했다. 게다가 노조 집행부 11명과 그들의 신원보증인들에게까지 28억8천만 원의 손배가압류를 신청했다. 손배가압류의 이유는, 노조 집행부가 업무시간 전에 지부에 가서 진행한 노조 홍보활동이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황당한' 것이었다. 법원 역시 손배가압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 항고를 진행 중이다.

회사의 '노조 죽이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에이앤오인터내셔널 영업지점의 대부분을 폐쇄하고 조합원 전원에게 서울에 있는 채권관리센터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이제혁 수석부위원장은 "그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던 에이앤오인터내셔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회사는 지부 직원의 90퍼센트가 노조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광주지부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채권관리센터와 강남지부로 발령을 내렸다. '발령' 과정에서 회사는 또다시 1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2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발령 당일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조는 7월 5일부터 정리해고와 손해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6월 25일 조합원투표를 거쳐 89%의 찬성을 얻었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안을 받은 합법파업이지만, 회사는 "파업 장기화로 주주들이 자본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의 합법쟁의를 압박했고 덩달아 경총 또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는 헛소문을 유포하며 '노조 죽이기'에 열을 올렸다.

양근석 노조위원장은 10월 28일부터 21일 동안이나 단식을 진행하며 사측의 '노조 죽이기'에 맞섰지만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회사는 더 나아가, 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장소에 대한 접근마저도 차단해버렸다. 사측은 업무 방해를 이유로 본사와 전 영업지점에 조합원 48인의 출입금지 가져본 신청을 제출했다. 결국 회사는 교섭을 요청하며 교섭사무실에 있던 노조원들을 경찰측에 신고해 지난 18일 노조원 21명 전원이 연행됐다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

장기투쟁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기대"

IMF 이후 수많은 외국계 투기자본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의 '치고 빠지기'식 경영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 회사들이 단기 투자이윤만을 얻고는 되팔아버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단기이익만을 목표로 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투기자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현 APLO FC그룹과 같은 회사들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투기자본에 대한 반발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어 그는 "노조의 투쟁은 정리해고에 맞서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이라며 끈질기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을 계기로 우리의 투쟁이 많이 알려져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그룹 본사 앞 길거리에서 농성을 벌이던 23일에도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은 그치지 않았다. 이날 구청 직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농성장에 있는 노조의 현수막을 '불법 설치물'이라고 문제삼았다. 노조의 반발에 구청 직원들은 "회사에서 자주 신고가 들어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지은이: 강현철, 이주일/ 펴낸이: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9월/ 352쪽

헌법, 형사법 및 행정법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관련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인권용어해설집이 출간됐다. 저자는 헌법, 형사법 및 행정법 등 인권분야에서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법제에 기초해 개념을 해설하고 있으며 논쟁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국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마치 법률가, 인권운동가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헌법, 형사법 및 행정법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인권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인권사전'과도 같다. 따라서 해설집은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안내서 노릇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인권용어에 관한 정확한 해설서 하나 아직 없는 국내 상황에서 이 책은 인권에 관한 사회적·법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인권에 관한 모든 용어를 해설집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법률용어가 남아있는 점, △인권용어해설에 있어서 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운동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사 처음으로>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파면 72명, 해임 64명, 정직 71명... 1,360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행정자치부가 22일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의 처리 방침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체 2,498명의 참가자 중 54% 이상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현재 24명의 노조 간부가 체포되었고 그 중 22명이 구속됐다. 이처럼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이 현실화되자 전국 7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사안에 비해 극히 과도한 징계이며 절차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수배중인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와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무시한 채 행정자부의 '처벌지침'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중징계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의적 처벌을 비난했다. 또한 "처벌절차에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 진행과정이 모두 비공개였으며 심지어 회의가 열리는 날짜, 장소조차 비공개였다"며 이는 "모든 종류의 징계나 재판에 적용되는 '공개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평소 15일 정도 소요되는 징계절차가 이번에는 3일만에 '신속히' 처리되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집단 중징계는 90만 공무원 모두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심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을 냉소와 무기력이 만연한 조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며 "행자부는 중징계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은 고강난 브레이크처럼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경찰은 24일 경남 창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지구당 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실에 있던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을 연행하는 '무대보식 밀어붙이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정부가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내세우는 것은 공무원 조직을 관료주의에 가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공무원노조가 목표로 한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은 여전히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길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거센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뚝 섰듯이 공무원노조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11.27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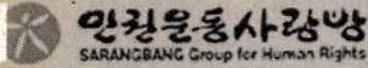
- ▶ 일시 : 11월 27일(토) 오후 4시
- ▶ 장소 : 국회 앞
- ▶ 주최 :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 반대, 한국군철수, 이라크 점령 중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선전물을 가지고 참가해 파병연장 반드시 막아냅시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27일 (토)
제 2706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2.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② '한원CC' 노조
3. <기자의 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국가인권위원회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김창국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성과를 주로 말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활동에 불만족스러워할 때 가장 괴로웠다"고 비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인권위 활동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바로잡아 줄 국가기구'를 갈망하고 그 설립에 앞장서 온 인권활동가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의무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을 깃발한 국민들이 달려갈 국가기관이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한 성과를 자축할 때가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절반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한다.

1기 인권위는 먼저 '인권의 잣대'를 법리 속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인권위는 주로 자유권 영역에 대해서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구제조치해왔다. 인권위를 '불편'하게 했던 인권단체의 비판은 주로 비정규직 차별, 빈곤 등 사회권의 구제를 도외시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 분야의 법제권고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법률가나 학자 중심의 1기 위원 구성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률가나 학자의 명쾌한 법 논리만으로 힘없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인권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법 논리'를 뛰어넘어 약자를 위해 용기 있게 발언할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이 2기 위원 구성에 있어 '인권 현장 경험'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인권위의 '관료화' 역시 문제이다. 관료적 태도는 인권위의 문턱을 높여 국민과 멀어지는 폐단이 있는 한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인권위 스스로가 권력의 일부분이 되는 이중 모순에 빠지게 된다. NGO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인권단체의 권고에 귀를 막은 것뿐 아니라 부안사태처럼 인권위의 권고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담이 없어진 시점이 되어서야 늦장 대응하는 것은 관료화의 또다른 모습이었다.

현재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 소문만 무성할 뿐 절차와 일정에 대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인권위원회는 고위 관료가 아님을 인권위와 정부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약자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진정으로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② '한원CC' 노조

"슬픔도 힘이 된다"

용인시 산 속에 위치한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에 들어서자 반짝반짝 광을 낸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주차장의 풍경과 대조적으로 한 편에는 바람정도만 피할 수 있는 천막이 쳐져있다. 바로 한원CC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

지난 7월 5일 회사가 경기보조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된 농성이 겨울에 이르도록 끝날 줄 모르고 있다. 노조 부위원장 서영미 씨에 따르면, "마스 타(경기보조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관리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자치회규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백지에 서명하라고 했다. '용역서명 아니냐'고 묻자 '아니라'며 서명하지 않으면 '뽕'(골프채 가방)을 주지 않겠다"며 업포를 놓았다고 한

다. 회사가 아닌 고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경기보조원들에게 '빚'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골프장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고'와 같다. 어쩔 수 없이 경기보조원 148명 중 40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해고를 당했다. 결국 용역과 해고에 항의하며 40명의 경기보조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 회사 편들기 바빠"

모두 여성노동자인 경기보조원들이 140일이 넘도록 농성장을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농성을 시작하고 15일째 되던 날 회사는 용역장패 50여 명을 동원해 농성 중이던 경기보조원을 집단 폭행해 2명의 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18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대외협력국장 임옥현 씨는 "길바닥에 뺨겨쳐지고, 맞아서 쓰러지고... 정말로 무서웠다. 듣지 못할 속도 다 들었다"며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얘기했다. 용인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용역장패들이 경찰의 비호 아래 폭력을 휘둘렀다고 노조원들은 말한다. 임 씨는 "시설보호 명목으로 경찰이 이미 회사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노사문제라 개입할 수 없다'며 회사의 탄압을 눈앞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의 '회사 편들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회사가 계속 교섭을 회피하자 경기보조원들은 8월 21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이 골프장 안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400여명이 출동해 50여명의 노동자들을 모두 연행해 갔다. 그리고 이날 연행된 임승오 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기도 한다. 서 씨는 "용역만 받아들이면 회사에서는 다 들어준다고 했다"며 경찰이 스스로없이 노동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노조는 용인 경찰서의 회사 비호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가압류까지 가는 악질 회사"

더욱이 회사는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현재 회사는 경기보조원 2명의 아파트에 대해 각각 2억 4천만 원을, 또다른 2명에게는 각각 5천만 원을 가압류한 상태다. 자기 명의의 집이 없는 조합원 33명에 대해서는 입출금 통장까지 가압류하며 14억 원을 걸어놓았다. 집과 통장을 모두 가압류 당한 임 씨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마련한 집이었다. 혼자서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지금도 가압류 생각을 하면 아무 것도 못하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생존은 더 막막하기만 하다. 아이들이 간식을 사 달라고 할까봐 겁이 난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임 씨는 "다들 어렵지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어서 속상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서도 투쟁을 지속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규율을 지켜야 하는 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는 딱지를 붙여 노동3권을 박탈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 온 회사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임 씨는 "회사는 필요할 때는 마구 부러먹는다. 풀도 뽑고 한 거울에 눈도 치우게 하고... 회사를 위해서 아무런 불만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결국 그 보상이 용역이었다"고 분노했다. 심지어 그녀는 눈을 치우다 넘어져 팔을 다쳐 3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회사는 단돈 5만원으로 치료와 보상을 대신했다며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객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천대도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서 씨는 "골프 내기해서 돈을 잃으면 보조원 때문에 돈 잃었다며 욕박지르고, 욕은 말할 것도 없다. 못생겼다고 바퀴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 씨는 회사가 오히려 고객들의 항의가 두려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얼마 전부터 생계를 위해 노조 차원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했다는 노동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흔들 눈물도 남아 있지 않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두움이 내리자 오명꼬치를 한 보따리 들고 이제는 장사를 하러 가야 한다며 나가는 노동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루 빨리 그녀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기사 처음으로>

<기자의 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언론이 선두에 서고 '국민들'이 배후에서 '수능부정 학생들'에 대해 못매질을 하는 동안 당사자 학생들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마치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낙오자인양 호들갑을 떨던 사회가 이제는 '수능부정 학생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한 교사는 "입만 열면 경쟁을 외치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도 '팬클럽'을 반복하며 대학에 들어가지만 하면 된다고 아이들을 몰아왔다"고 고백하며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모두 이

못난 선생에게 돌을 던지라"고 '반성문'을 썼다. 어쩌면 '수능부정 학생들'은 로또 광고 문구처럼 '인생역전'의 신화를 꿈꾸며 '수능부정'을 감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수능도 로또도 한 번의 대박으로 '성공'의 계단을 오를 수 없음을 보여줬다.

우리사회는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철저히 주입해 왔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만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교육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결과로서의 물질적 부만이 최고의 명예가 되고 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신화'를 신봉하는 어른들이 '사회 주류'에 서서 아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현실, 바로 결과만을 중시하며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어른들이 '수능부정'으로 이끌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부정학생'들의 구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론도 12명의 학생들이 구속됐지만 오히려 "주동자 22명 중 12명만을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적절한 형평성 논리로 마녀사냥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은 희생양만을 낚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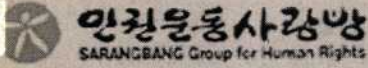
부정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공정경쟁'은 '교과서'처럼 공허했을지도 모른다. 일부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수능부정을 모의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합법적'으로 고액의 '죽집'에 과의'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은 이미 아이들에게 '불가능한 임무'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말하면서 어떻게 '국영수' 점수만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영어 100점 아이와 '쫄쫄' 아이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해 "부정학생들을 꾸짖기만 할 수는 없다"며 "그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시험 점수 위주 교육의 희생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학벌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낮은' 수능점수로는 이른바 '일류대'를 꿈꿀 수도 없고 이들이 또다시 청년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심각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악순환은 구조적인 것이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개인의 몫인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악순환의 원죄를 모두 '낮은 수능점수' 탓으로 돌리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로또 한 장에 '인생역전'을 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30일 (화)
제 27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도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핸드폰도 '불심검문'
2.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3.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23일 ~ 29일)
5. <알림>
6.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경찰이 29일 발표한 대학수학능력 시험 부정 조사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수능시험 당일 SK와 LG텔레콤을 통해 전송된 문자메시지 중 5이하의 숫자로 된 문자 24만 건을 조사해 그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문자는 5백 50건이라고 밝혔다. KTF 역시 이날 오후 1만 7천 건의 문자를 제출해 '문자 조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26일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이동통신사에게 시험 당시 전송된 문자 중 5이하의 숫자로만 구성된 것을 넘겨받아 조사 중인 것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 방식은 우선 '영장주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헌법은 영장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야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법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급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숫자로만 된 문자라도 모두 수능부정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일단 뒤져서 나오면 수사한다는 방식이 문제"이며 이는 "영장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경찰은 29일 발표에서 "현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문자의 수를 부정행위 가담자의 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선부른 예단"이라고 밝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작위 수사를 스스로 입증했다.

경찰의 방식은 마치 우편함을 뒤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편지를 뜯어보고 그 중 물증이 되는 것을 기초로 역수사해 나가는 방식인 것. 이것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면 '과학수사'라는 이름으로 둔갑한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이에 대해 "첨단 기술을 동원한 과학수사는 사실상 수사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편리함과 신속함이라는 첨단기술의 동원은 사실 경찰의 편의 위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은 그 뒤에 가려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통신상으로 일상적이며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일테면 경찰이 공무원 노조 활동을 내사하려고 모든 문자에서 '전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추려내어'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끔찍한 예를 든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으로 적법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추려내어' 과정에서 '비밀침해'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실제 미연방수사국은 1999년 '카니보어(육식동물)'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죄수사와 예방을 명목 삼아 일반인들의 이메일까지 검열하고 있는데, 그 한 방법이 '특정' 단어를 사용한 이메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오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통신상의 불심검문'이라고 말한다.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불심검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고스란히 발생한다는 것.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은 아직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특히 신체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열우당, 폐지 '오락가락'...인권단체, "연내 폐지"

'4대 개혁법안'을 연내에 일괄처리하겠다고던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때 '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을 의식해 '4대 개혁법안' 중 국보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만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올해 안에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10월 이미 결정한 당론을 뒤집는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감, 개혁을 열망하는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의 이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열린우리당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열린우리당은 28일 밤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중앙위원회와 전략기획자문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듭한 결과 '4대 개혁법안 연내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연대는 "국보법의 연내 폐지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총선 직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이번 행태는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타협이나 협상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반드시 국보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민주적 의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연내 처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주문했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은 "국보법 폐지를 방해하는 '적'은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 있다"며 "더이상 외부로 핑계를 돌리지 말고 폐지를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개혁을 열망하며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흐름에 모아졌던 시선들이 점차 우려의 눈길로 바뀌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따뜻한 겨울나기는 가능할까

요즘 하루 종일 머리 속은 툭툭툭툭 복잡하기만 하다. 가끔은 숨이 턱 막힌다. 긴장 때문이다. 56년 동안 한국사회를 야만의 동토로 얼어붙게 했던 국가보안법의 명줄이 끊어질 것인가. 아니면 포강만 달리한 채 구차하게 연명할 것인가. 그 운명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 때 참 추웠다. 날씨가 추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맘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있었다. 송두율 선생이 귀국해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감옥살이를 시작하고, 그리고 12월 초 첫 공판이 열렸다. 한번도 밝아본 적이 없는 법정에서 들어서면서 탄압이 교차했다. 대학시절 친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법정투쟁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싸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송 선생의 뒷모습도 너무 추워 보였다.

내 맘 속의 추위는 의로움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송 선생에게 보여준 압박과 냉대에 내 자신이 심한 충격을 받았다.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까지 반공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송 선생을 비난할 때, 난감했다. 그의 행적이 모두 명료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회가 감히 송 선생을 '해방 이후 최대 간첩'으로 궁지에 몰고 감옥에 가둘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송두율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노골적으로 말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줄지에 대책위 활동은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첫 공판을 기다리면서, 송 선생처럼 나도 줄지에 세상으로부터 패대기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의욕이 추웠다. 그리고 '외로운 투쟁'에 동참하여 세상과 한번 싸워보자는 오기로 10여 년간 따뜻한 연구실에서 빛바랜 자료를 뒤적이던 안온한 삶을 접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송 선생은 1심에서 7년형을 받았다. 나의 외로움과 추위는 계속되었다. 봄은 왔건만, 진정한 봄날이 그리웠다. 하지만, 마냥 기다린다고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이 땅에 진정한 봄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온다! 그리고, 봄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몰두한 지 7개월,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은신했다가 태양빛 가득한 거리로 나선 낯선 이방인처럼, 서툰 열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

투쟁의 거리로 나선 이후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왔다. 국가보안법의 명운이 걸린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연내에 처리하겠다

던 열린우리당이 흔들리고 있다. 이 겨울을 더욱 춥고 비통하게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무너지려 한다.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고 인권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을 정녕 불가능한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어 그 역사를 이루고 이 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김정인님은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23일 ~ 29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전국교수 764명 선언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처리 촉구(11.23)/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 국보법개폐관련 법률안 국회 법사위 상정 안 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 열고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11.24)/ 여의도 천막 농성장 4대 개혁입법 관련 연대단체 공동 촛불집회(11.26)/ 국보 끝장 실천단 결성, 국보법 폐지 집중 홍보 활동 벌여(11.26~28)/ 열우당 국보법 폐지 유보 논의에 인권·사회단체, 연내 처리 확답 요구(11.29)

2. 비정규직 관련법, 기필코 막겠다

인권단체, 인권위에 "비정규노동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할 것" 촉구하며 항의 서한전달(11.23)/ 전국비정규직노조(준),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요구하며 30여명 삭발, 무기한 파업 돌입(11.24)...대표자 4명,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폐기 될 때까지 땅 밟지 않겠다"며 고공농성 시작/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법 폐기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요구하며 6시간 동안 시한부 총파업 전개...국회 앞 등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집회 동시 진행(11.26)/ 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관노위에 상정...양대노총, 국회 앞에서 법안 통과 저지 투쟁 전개(11.29)

<기사 처음으로>

<알림>

◆ 다음주부터 인권이야기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 미니 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 배경내 씨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조석영 씨 (보호감호소출소자모임 대표)
- 류정순 씨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기사 처음으로>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 빈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반드시 10대 소식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응답지 접수는 ①팩스(02-741-5364) ②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com) ④전화(02-741-5363)로 합니다. 접수는 12월 6일(월)까지이며, 설문 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노동>

- () 1.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박일수 씨 분신 사망
- () 2. 고대 용역 미화원들 노동조합 결성해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개선 요구
- () 3. KT상품판매팀 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 행위와 노동감시 확인되어 산재 인정
- () 4. 삼성SDI, 노조활동 노동자에 대해 불법으로 복제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

- () 5. 열지정유, 파업참가 노동자에게 '반성서약서', '경위서' 강요하는 복귀프로그램 등으로 노동자 탄압
- () 6. 정부, 비정규직 확대 불러올 비정규직법안 개악 시도...노동자들 총파업 불사하며 결사 저지
- () 7.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 74일간의 장기 농성으로 복직 합의
- () 8.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어해 노동계 강한 반발
- () 9. 공무원 노조, 노동3권 주장하며 파업 돌입...정부 구속 및 대량 징계

<빈곤>

- () 11. 헌법재판소,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10/28)
- () 12. 정부의 최저생계비 등 빈곤 대책에 대한 저항 붕괴...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기구 발족

<건강권>

- () 13.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11/26)
- () 14. '국내농산물 사용', '조리종사원의 노동환경을 개선'등을 요구하는 학교급식조례안 제정 촉구

<교육권>

- () 15. 서울 일부 대학 고교등급제 실시...평등한 교육 기회 박탈
- () 16.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 일파만파...보수 사학재단 학교 폐쇄 주장하며 반대
- () 17. '대입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확산...'수능부정'으로 입시제도 문제점 다시 불거져
- () 18.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1/8)...교육 공공성 여전히 미흡

<프라이버시>

- () 19. 범죄 예방 목적으로 강남 CCTV 설치시작으로 서울 전역 확산
- () 20. 경찰과 검찰 미아찾기 내세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시도
- () 21. 정부와 지자체,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생체정보(지문, 유전자, 홍채 등)'로 이용하려해 반발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22.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국적으로 다시 불붙어
- () 23. 헌법재판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8/26)
- () 24. 대광고 재학생 강의석 씨 '예배선택권' 주장하며 50여 일간 단식 끝에 '종교의 자유' 일부 되찾아와
- () 25.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약 8만 건에 대한 표현물 검열 사실 드러나 각계 폐지 촉구
- () 26. 법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이적단체 규정(7/20)...국보법 여전히 효력 확인시켜
- () 27.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결정(8/26)

<집회·결사의 자유>

- () 28. 소유규제를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9/7)
- () 29. 시민단체, 언론 민주화를 위한 '언론 3개 개혁 입법' 청원하며 국회통과 촉구하는 장기 농성
- () 30. '불심검문 강화', '총기 규제완화', '1인 시위 규제' 등 경찰력 강화 몸부림

<참정권>

- () 31.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국민소환권', '국민발의권'으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 운동 확산
- () 32. 선거연령 18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 확산

<이주노동자>

- () 33. '고용허가제' 실시(8/17)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 380일 동안 천막농성...농성책임자 사달 타파 씨 강제추방 등 정부 탄압 가속화
- () 34. 정부, 불법체류자에게 테러리스트 혐의 두는 정책 추진으로 각계 맹비난

<여성>

- () 35. 호주제 폐지 요구 각계 확산
- () 36. 성매매방지법 시행...여전히 업주들의 이해관계 사슬에 묶인 피해여성 구제 시급

<장애인>

- () 37.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교육예산 6%확보와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
- () 38. 정립회관의 끝은 어디인가요...관장연임 철회 요구하며 장애인 및 관련단체들 6월부터 농성 진행 중

<성적소수자>

- () 39.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 () 40. 법원, 사실혼 동성애부부 위자료 청구소송에 "부부 인정 못 한다"며 기각(7.27)

<감옥수용자와 인권>

- () 41. 사회보호법 폐지 압박...삼진 아웃, 경과규정 도입은 여전히 논란
- () 42. 주5일 근무에 따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집건 제한에 대해 수용자와 인권단체, 인권위 집단 진정

<시설수용자와 인권>

- () 43. '성립재단' 등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심각

<신자유주의와 인권>

- () 44.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가결

<불처벌·과거청산>

- () 45. 의문사위,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에 대해 민주화 운동 인정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 색깔시비
- () 46. 의문사위, 과거사 진상규명 통합법 필요 남기고 2기 위원회 임기 끝내
- () 47. 포괄적 과거청산법 요구하며 인권단체, 국회 앞 장기 농성...국정원 등 국가기구 과거청산 움직임

<평화>

- () 48. 파병철회, 추가파병 반대에도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 국회 가결, 자이툰 부대 '몰래' 출국에 이어 연장 추진
- () 50. '반테러' 명분삼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생체정보채취 및 생체미자 요구
- () 51. 이라크는 아직도 전쟁 중, 미국의 이라크 포로 성고문 학대 및 팔루자 공격
- () 52. 이라트 저항세력에 의해 김선일 씨 사망...파병 철군 요구, 전범민중재판기소운동 등 풀뿌리 평화운동 확산

<북한인권>

- () 53. 미 의회, 북한인권법안 통과...인권단체 및 국제사회, "인권개선 아닌 체제붕괴 수단"
- () 54. 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기타 ()

수고하셨습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